

1조원 이상 사업, DJ정부 4개 배면 21년간 3개뿐

예타당성조사 전면 개혁대야

<2> 광주·전남 예타사업과 과제

광주·전남이 미래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영남권과 같이 호남권역 내외를 잇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망을 우선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련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초광역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연구개발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정부에 제시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구소멸지역이나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광주·전남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사업을 집중해 인구 증가 및 경제 부양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과 선진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광주·전남

예타 문턱 넘는 사업 모두 70개

도로·교량이 24개로 가장 많아

영남·충청권 비해 대규모 사업 부족

연구·개발 분야 고품 우주센터 유일 시·도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시급

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이 지난 21년간 정부의 예타 문턱을 넘어선 사업은 모두 70개다. 이 가운데 도로·교량이 2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철도(12개), 산업(10개), 항만(9개), 하천(6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로·교량, 철도 등의 기반시설

운데 광주와 전남을 잇는 초광역사업은 1999년 무안~광양 고속도로(사업비 1조9879억원), 2000년 호남선 전철화(1조3250억원), 2001년 전라선 전철화(1조1678억원), 2009년 광주송정-나주 도로 건설(700억원), 2019년 경전선 전철화(1조7703억원) 등 5개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국도를 확장하거나 강변도로를 신설하는 소규모 사업이었다.

1조원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도 영남권, 충청권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었다. 70개 사업 중 1조원 이상 사업이 8개에 불과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1999-2003)에 4개가 집중돼 있었다. 1조원 미만 5000억원 이상 사업은 2020년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 재개발사업(6061억원) 등 6개에 불과했다. 반면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2010년 영산강 독눈임 나주댐(758억원) 등 20개에 달했다.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은 2001년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2999억원) 등 36개였다.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성장을 이끌 미래 산업 분야는 10개, 연구개발 분야는 고작 1개, 문화·관광·기타 시설 분야는 4개에 불과했다. 산업 분야의 주요 사업은 2010년 광주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1891억원), 2011년 광주 초광역 연계 3D 융합 산업 육성(대구·경북과 함께 3266억원), 2012년 전남 F1 연계 고품질 자동차 부품개발 및 기반구축(786억원), 2015년 전남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602억원), 전남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경북과 함께 1865억원), 2015년 광주 3D콘텐츠미디어산업 활성화(1013억원) 등이 있었다. 2016년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조성사업(3030억원), 2019년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1000억원), 2020년 광주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40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연구개발 분야는 21년간 고품 우주개발센터

(2723억원)가 유일했다. 문화·관광·기타 시설은 2004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7174억원), 2006년 전남 여수 국립해양과학관(155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예타를 통과했지만, 지역 내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예타를 재통과하거나 사업이 난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다. 2013년 전남의 흑산도공항(1433억원)은 7년 넘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 도시철도2호선은 2004년 8652억원으로 예타 문턱을 넘었으나 2010년 다시 1조7394억원으로 재통과했다. 이 사업은 10년이 지나 착공했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지역균형뉴딜 등 한 국형 뉴딜사업에 대비해 광주·전남을 지역 간, 지역 외로 연계시킬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 역량과 직결되는 연구개발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이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나서 민간공항 통합과 연계 추진 가능성

새 국면 맞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차원 지원에 급물살 탈 듯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에만 미루고 뒷짐을 겨왔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움직이면서 향후 군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문제도 광주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간 4차 협의체인(가칭) '공항 관련 정부, 광주·전남합동 TF'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TF 구성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광주 군공항 이전 현안과 관련해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범정부적인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개정과 관련 용역 등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이전 대상지로 꼽히고 있는 무안군과 해남군, 고흥군을 대상으로 한 소음 피해 최소화 지역, 이전 지역 지원 대책과 군 공항 인근 특화단지 조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공항 이전 TF구성에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선 점, 그동안 뒷짐을 겨왔던 국방부가 참석한 점이 주목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롭게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고, 국방부까지 함께 참여한 배경에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원샷' 처리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돼 더욱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애초 계획했던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직접 팔 소매를 걷어 부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광주시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권익위원회 등에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무안군이 지난 2018년 8월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 까지 무안 공항에 통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을 고시했다.

하지만, 광주시민 79.5%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후 진행해야 한다"는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이 나오면서 두 민간공항 통합에 빨간 불이 켜졌다. 따라서 국토부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군공항 이전 사업 주체인 국방부까지 포함시켜 실무협의체 구성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관련 정부부처들이 나서지면서 향후 좋은 해결 방안과 함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556조→558조원' 11년만에 순증

6년만에 법정시한내 처리

3차 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보다 2조2천억원 확장된 규모다. 정부안보다 순증되는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 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액 사업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 α,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각각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등에 최대 200만원의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의 틀이 유지될 전망이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액되는 5조3000억원에는 '한국판 뉴딜'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국제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민

주당과 10조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극한 대립이 접점을 찾은 것은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전발 심야 회동에서다.

국민의힘이 6조원까지 감액 요구를 낮췄고, 정부가 5조3000억원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당(8조5000억원)과 야당(10조5000억원)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칼집이 이뤄졌다.

국제 발행은 코로나19 재유행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설득을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전향적으로 수용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빛나는 작은 아이디어가 글로벌 콘텐츠가 되는 그날까지

상상 속 콘텐츠를 실현하자!
크리에이터랩 장비교육

빛나는 작은 아이디어가 글로벌 콘텐츠가 되는 그날까지

세상에 하나 뿐인 콘텐츠를 만들자!
1인 크리에이터 스킬업

빛나는 작은 아이디어가 글로벌 콘텐츠가 되는 그날까지

나의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지자!
웹툰 창작아카데미

“창작자들의 즐거운 놀이터”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전남콘텐츠코리아랩은
전남 창작자분들을 응원합니다

홈페이지 : www.jnckl.or.kr
오시는길 : 전남 순천시 장평로 60